

• 월 • 레 • 특 • 강 •

# 지방화시대의 프로네시스\*

김광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전개되면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프로네시스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로네시스는 희랍어로서 국가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테그네 즉, 기술로서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실천적인 지혜로서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데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인류의 발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깊이있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물질적인 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래에 관해서 쓴 여러 저서들 가운데

우리나라 신문에도 소개된 “정보화 사회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인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를 구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실리콘 스텝 오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사적으로 조감하면서 미래를 좀 걱정스럽고 비판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Vision of the Future」, 또 「Creating a New Civilization」 등의 책들은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산업 사회의 지배 원리가 타당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만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대량 생산이라든가 大조직, 거대 조직같은 것도 모두 매우 관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고 大조직일수록 신축성이 없어지고 관료주의가 팽배해져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000년부터 1750년까지 농경 사회라고 하면 그 후부터 1990년까지 산업 사회라고

\* 이 글은 강연을 풀어 정리한 것임으로 표현에 구어체가 섞여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며, 그후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함에 있어서는 원리와 원용과 패러다임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화시대가 전개되면서 결코 지금과 같은 생각, 행동 양식, 사고 방식을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도 결코 그냥 이대로여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복잡성의 비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이 바뀐다는 것인데 그 조직을 '보이지 않는 조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직에는 사람, 물자, 예산, 그리고 조직도표가 있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야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 가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흔히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假想(virtual)이란 단어입니다. 대학도 이제는 개방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의 경지를 넘어서 virtual university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도 사람과 사람간의 만질 수 없고(intangible) 보이지 않는(invisible) 것에 주목을 하지 않으면 조직이 살아 남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라는 인식입니다. 조직의 경우도 10 명이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형성한다라는 「물리학적

기계론」의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그 자체가 부분이고 동시에 전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칼테지안-뉴턴이안 패러다임에서 생각해 왔던 부분의 합이 전체라는 물리학적 인식인식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양자역학이 발달함으로써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절대 기준, 절대 가치의 논리가 거부를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변하면서 '부분이 곧 전체'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지방이나 지역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지방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본체(identity)이며 실체(entity)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방화시대의 전개,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를 말할 적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앙과 대칭 내지는 비대칭, 불평등 관계로서의 지방과 지역에 관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경기도 지사가 당선이 된다, 부산 시장이 당선이 된다, 그리고 서울 시장이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러한 것은 중앙 장관보다도 그 격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중앙과 지방의 비대칭 관계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러한 인식은 시대의 변화 속에 흐르고 있는 패러다임의 轉移로서, 이른바 부분이 곧 전체라고 하는 「생물학적 지각론」의 패러다임 인식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이, 상사와 부하의 개념이 없

이 모두가 주체일 수 있고, 또 모두가 객체일 수 있고 모두가 상사일 수 있고, 모두가 부하일 수 있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속에는 즐거운 것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몇 가지로 인수분해하여 공통되는 것들을 가려서 하나의 축으로 구성해 보면 한 축은 분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화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단순 분화였지만 그 후에는 복잡한 분화입니다. 오늘에 와서 그 분화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분화(simple differentiation)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분화(complex differentiation)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3차원을 넘는 분화(hyper differentiation)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 심각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관악캠퍼스에 건물이 자꾸 들어서지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은 한 100만 평 정도 되지만 가용 면적이 30만 평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건물이 들어서 뻘뻘하여 아주 웅장한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계획위원회가 있어 어느 대학 또는 어느 연구소에서 건물을 짓겠다 하면 몇 달에 걸쳐서 그 계획과 건물 모양까지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이 지연되게 됩니다. 저희 행정대학

원도 정보통신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4층의 최신형 인텔리전트 건물 한 동을 짓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을 받은지 9 개월이 지나서야 부지를 정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이 위원회는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하고 있어 신임 총장께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의는 바로 3차원을 넘는 차원(hyper dimension)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과대학의 학생, 대학원 박사 과정의 학생이나 少壯 교수에게 연구비를 조금만 지원하여 지리학과 교수와 함께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수행케 하는 것입니다. 즉,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모든 공간을 컴퓨터화하고 3차원으로 색깔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빈 공간과 기존의 건물, 건물의 모양이나 크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원의 공간을 변형시켜가면서 서울대학교를 일목요연하게 조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서울대학교의 예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3차원을 넘는 분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두 사람의 힘으로써 모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노력을 해서 하나의 조직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화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축이 분화해 갈 때 다른 한 축에서는 어떠한 작용이 발생되는가 하면 초기에는 약간의 다양성을 띠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그것이 시스템적인 것으로 체계를 잡고, 말기에 이르면 monocentric 이라고 해서 조직은 중심체를 정점으로 크게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칭 개념이고 상대적으로 양쪽은 아이러니컬한 대칭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는 한없이 분화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붙잡아 매려고 집중적으로 monocentric한 힘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인류의 발달사를 쭉 정리해 보면 현재는 hyper와 monocentric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무질서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고는 빈발해도 그것이 중심축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 내지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라고 다니엘 벨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서의 중심축은 지식사회의 축과, 조직사회의 축, 그리고 범세계적인 축의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오는 6월 27일에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내년 4월 11일에는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있어 代議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별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지 않고, 또 지방의회가 91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근근히 지방정치를 주도해 왔다고 하지만 代議민주주의라는 것이 뿌리를 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代議민주주의를 이렇게 지속해도 좋은 것인가에 대해 학자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문헌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민주주의에 대한 비

판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민주주의 내지는 풀뿌리, 민초같은 표현을 쓰면서 민주주의 시대를 전개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것이 우리로서는 대단히 긴요한 것이어서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지만 우리는 항상 몇 걸음이 늦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민주화의 도정속에서 이것은 이미 유행이 지나가 버린 것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828년부터 민주화의 물결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828년이라는 시기는 전세기말로서 불란서혁명과 미국혁명이 기초가 되어 민주화의 바람이 제대로 불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98년이 지난 1926년까지 민주화의 제 1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후 암흑기를 거쳐 1942년부터 1962년까지 약 20년 동안을 제 2기로 보고, 또 10년간의 암흑기를 거쳐 1974년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청년 장교들이 입성하면서 불기 시작한 제 3의 민주화 물결이 동구라파를 해방시키고, 구소련을 해방시키고, 남미의 군사독재정치를 해방시키면서 민주화의 제 3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에 이루어진 6·29 선언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어서 전세계적인 민주화의 추세로 보면 당연히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런 시기를 민주화의 변화기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代議민주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이제 더 이상 남한에 내 의사를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직접

‘내가 나를 대표하는(representing myself)’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말은 누구를 대신 내세워서 나를 대표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직접 대표로 나서야 되겠다’라는 뜻으로서 그런 민주주의를 「準직접민주주의제」 또는 「超간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代議민주주의제라는 것이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며, 오늘날에 와서 여러 시민 단체들, 사회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나 스스로를 대변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많은 엘리트들이 전면에 부상해서 민주정치, 풀뿌리 민주정치를 전개시킨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방정치라고 하는 것이 본래 기본적인 제약을 갖고 있는데다 또 이러한 의심스러운 代議민주주의제도 하에서 뜻대로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매커니즘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懷疑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제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속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언급된 조직과 조직, 사람과 사람간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변화에서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는 수없이 많은데 경영학과 관련된 최근의 저서인 「Jumping the Curve」에 있는 Eastern Airline社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astern Airline社는 미국에서 사업이 잘 되던 항공사이지만 Donald Trump社에 3억 6,500만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그 매각 대금 평가 방법의 기

초는 비행기의 보유 대수가 아니고 Eastern Airline社가 보유하고 있던 당시의 고객 명단, 비행기의 이착륙 스케줄같은 소프트웨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 그리고 가상의 것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책에서는 음악에 비유했는데, 음악이라는 것은 음표가만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음표와 음표 사이의 침묵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旋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호와 음표가 아닌 선율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우리는 여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집권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토플러는 「권력 이동」에서 선거가 끝나면 집권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당’(invisible party)이 집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정당’은 바로 ‘관료주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대단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힘이 없어지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중요한 것은 ‘정보’라고 말을 합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보는 물론 중요한데 그것은 기초이고, 정보를 엮을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더 엮어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 慧眼 즉, 실천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글에서 보니까 사자를 가두는 창살이 있는데 사자를 가두는 힘은 창살이 아니라 창살과 창살 사이의 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승리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는 조직사회 축과,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가 전개되어 엘리트가 등장하고,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때론 허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공부를 한 사람들, 큰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관료들이 정작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사회 구성의 원리가 간단한 것이 아니고 매우 복잡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이 사회 구성의 원리가 하나일 수만 없습니다. 이를테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축에는 사회 구조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 정치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화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구조의 영역을 지배하는 원리는 효과, 효율, 경제성이고, 정치의 영역을 지배하는 원리는 평등과 자유이며, 문화의 영역을 지배하는 원리는 자아 실현 즉, 자아의 발견이라든가, 보람된 삶을 산다든가,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서로 상충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원리가 더 우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 가지 원리는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한 이들 원리가 공존하고 있고, 그 원리끼리 부딪치고 타당성을 잃어버려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은 보통의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일에 매진하는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

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노력이 좌절되는 경험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長이 선출되면 나라에서 임명한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 쪽에 눈을 돌리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트인 개인에게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조직의 힘이 그 상승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개인의 리더십을 위하여 그 사회 구조는 그의 활동을 제약할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앙에 버금 내지는 능가하는 능력을 갖춘 지방의 엘리트들이 등장을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구조 및 조직과 관습의 체계들이 그로 하여금 마음대로 활동하고,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와 청원군의 예를 들면, 시·군을 경계 삼아서 상·하수도가 다 되어 있는데 한 발짝만 넘어 청원군을 가면 상·하수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시와 군의 경계는 바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도로의 경우에도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지방 간선 도로는 도청에서, 지방 細道는 각 시군 등 지자체에서 관리함

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겪는 생활상의 곤욕이라는 것은 자주 국도나 지방도로를 넘어서 논이나 밭에 가야 하는데 그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입니다. 국도에 사람이나 경운기같은 것이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 하나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어 달리는 자동차에 속도 감각이 뛰어날리 없는 시골 아이들, 아낙네들, 노인들이 당하는 인명 또는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든 것이지만 도로가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나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편리한데 지역주민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사정이 전국토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 문제, 공원묘지를 만드는 문제 등 정부가 관여할 필요 없는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의 또 한 예로서, 인구 6만 명의 도시 평택시를 들면, 평택시는 영국의 렘버스 지역처럼 남북이 아니라 동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동쪽인 고속도로와 철도 사이는 상업 지구로 상가가 형성되어 비교적 중산층이 거주하나 변두리는 농업 생산 양식 그대로 농촌 사회가 상존하고 있고, 더욱이 해안 지대로 나가면 미군 부대가 지역 내의 문화 갈등을 촉발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이것이 중앙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는 많은 문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보면, 단체장이 선출이 되어도 중앙정부는 재정 문제, 감사 문제, 또 인사 문제로 모든 권한을 장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잘못했을 때 중앙 장관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지 명령권을 가지고 있

습니다. 반대로 단체장이 어떠한 특정한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촉하는 행정 명령의 권한을 중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방장관이라는 단체장은 극히 제한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앞으로 전개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상인 것입니다.

최근 다른 기회로 목포시장을 지냈던 분과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선 뒤에 목포시도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여 큰 도로를 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도로가 설계상 국민학교 운동장을 관통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탄원한 결과 나온 답변은 설계는 변경할 수 없고 국민학교 운동장을 관통하는 도로를 뚫고 나서 흙을 덮고 운동장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실상이기 때문에 '지방시대의 전개'라는 말의 표현은 매우 좋지만 걸리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행정의 몇 가지 사정은 이렇다 해도 한편 정치 문제는 지방의 발전을 옥죄기에 딱 좋게만 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국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당이 탄생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명제를 놓고 토의를 하기 시작하면 해답이 없게 되지만 지금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8조와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설립은 결코 편안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헌법은 정당 설립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지만, 정당법으로는 지방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울산같은 시에는 환경도 걱정이 되고, 근로자들도 많기 때문에 노동당이 탄생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창원공단같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에 있는 정당들이 현재 계속 지방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의 경우 후보를 경선하고 있는 정당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광역자치 다음인 기초자치에서 정당의 색깔을 배제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선거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당이 기존의 정당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지방자치시대가 제대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 기존 정당의 틀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아주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기존 정당의 틀 속에서 지방정치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근대 국가의 소멸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나오는 말들은 중앙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와 지방이 그대로 연결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같은 나라를 보면, 버클리市 같은 소도시의 시장이 시의회에 불참하고 남아연방에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한 기업의 시민들이 남아연방의 아파타이트(apartheit) 즉 인종 격리(차별)에 대해 항의를 하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도시의 시장이 남아연방을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각 州에 한국사무소가 상주해 있을

것입니다. 농산물을 팔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촉매제의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쓰게됩니다. global의 glo하고 localization의 lo를 뺀 나머지 글자를 합쳐서 ‘glocalization’ 즉, ‘지구지방화’라는 말을 씁니다. 지방 또는 지역이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각 시, 도와 작은 시 및 군들이, 그리고 큰 도시의 구와 구청장이 얼마큼 세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은 매우 시기상조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작해야 일본에 가서 농산물을 파는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는데, 그것이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매우 유치한 단계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온 편지 하나 읽고 직원이 답을 기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런 상태이니 ‘세계화’라는 말은 어디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지방화시대를 맞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인간답게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의 의사의 輕重이 따로 없이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國政과 地政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법을 새로 만들고 고치고 하는 모든 일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인류가 가능하면 좀 평화롭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중에 그나마도 민주주의제도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지금보다 나



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전개되지만 우리가 테크네만 생각하고 프로네시스 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나쁜 상태 즉, 환경 공해라든가 인구의 폭동이라든가 인성이 매몰되는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정보화 사회가 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결코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계는 아프리카에서 보듯이 인종 분쟁, 지역 분쟁, 해게모니 쟁탈전같은 충돌 속에 더 휘말려 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계 평화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 해도 지역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북 관계도 순탄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희망적인 기대에 불과한 일이고 어떠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 도저히 모릅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 무책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도래할 사회, 이른바 '정보화 사회'라고 해도 좋고 '미래 사회'라고 해도 좋고 '21세기'라고 해도 좋은 그런 사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원리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원리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의 창출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이른바 부의 창출 기초인 노동, 자본, 토지같은 것이 아닌 지식과 정보같은 요소들을 많이 고쳐가면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열린 한국미래학회 월례발표회에서 국가 경쟁력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고 여기서 나온 주된 논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부와 기

업의 역할이 지금과 같을 수 없으며, 앞으로 기업 쪽에 많은 역할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줄이면,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경제·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의 논의는 더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 사회에서 타당했던 정부와 기업간의 역할 분담의 논리는 이제 떠나가고 있습니다. 요지는 새로운 문명의 창출을 위해 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가려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문명을 창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새로운 문명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제대로 찾아내는 프로네시스입니다.

지금 일렉트로닉 패스웨이, 슈퍼하이웨이같은 표현들을 쓰면서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규모의 경제'가 '속도의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매릴린치라는 회사의 한 간부는 '돈이 빛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속이 제 3의 비지니스를 실제 기간에 더 가깝게 접근시키며, 가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상의 시간이 아니라 실제의 시간 속에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민주주의가 전개되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새로운 문명을 기업이 앞장서서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방화시대를 제대로 맞는 프로네시스입니다.♣